

전북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청사진 그린다

새만금 드론중심 방위산업 테스트베드 세미나 개최 지역적 이점과 유·무인복합체계 개발 최적 입지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도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자 부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새만금 방위산업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과 LG 넥스원 등 관련 기업, KAIST, 혁신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북자치도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지역의 감점을 반영한 드론

중심 방위산업 시험·연구 인프라 구축(안)에 대해 정부,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 기술적 지문을 통해 향후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그 목적이 있다.

세미나는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안을 먼저 설명하고 이후 방위사업청 등 기관·기업의 5개 분야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부안군에서 새만금지역 에너지 지원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드

론중심 방산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관련 기관·기업 집적화로 방산 혁신클러스터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주제 발표에서는 군사용 드론 기술발전 방향, 실증 테스트베드 연계 스타트업 기업 육성 사례, 기동체계 고출력 전지 적용 방안, 3D 방산 부품 보수 사례, 드론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한 관광상품 연계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체계종합업체의 사례발표를 통해 새만금 지역이 드론·무인기 체계의 시험평가를 위한 최적의 환경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연료전지, 3D

프린터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드론, 자율주행, AI 연계 기동로봇 등 최첨단 산업의 실증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 가능한 부지가 많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점에서 새만금 지역은 전북 이남 지역 시도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육·해·공 복합 실증이 가능한 최적지로 인정되는 만큼 그간 관련 기업·기관들로부터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

전북자치도는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방위산업을 글로벌 생명경제 비전을 실현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발전협의회' 출범과 함께 새만금 지역 내 방위산업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에 대한 계획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방위산업을 국가사업 연계 기반조성 및 연구개발, 대학·기관-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교류 정례화도 도의 기업유치 등의 실행과제로 구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도화하고 있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가 내놓은 방위산업 실증 테스트베드의 장점은 물론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새만금 지역의 감점, 우리도의 주력산업이나 혁신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부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새만금 방위산업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기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최병관 행정부지사, 24여명에게 위촉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4명의 무형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새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무형유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전달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의 인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자문 기구로 지난 4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구성했다.

24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4년 4월 24일부터 2026년 4월 23일까지 2년간이며, 앞으로 도내 무형유산의 발굴과 무형유산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 보존 중심의 정책

이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무형유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지향적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 가치 있는 무형유산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정된 무형유산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무형유산위원회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으로 전 서해대학교 총장을 지낸 서동석 교수가, 부위원장은 전주교육대학교 정한기 교수가 선출됐다. 서동석 위원장과 정한기 부위원장은 무형유산 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문화예술의 고장 전북의 위상에 걸맞게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지리해 주신 위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무형유산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환경점검 사전예고제 효과 '톡톡'

환경법 위반율 17.9% 감소...자율환경 관리체계 정착으로 기업 환경관리능력 향상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점검 사전예고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년간의 수치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환경법 위반율이 감소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시설 점검 사전예고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기존 단속 중심의 불시점검에서 예방중심의 점검으로 전환한 것으로 2022년 10월 산업단지 기업을 시작으로 14개 시·군 모든 기업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2년 계도기를 지나

지난해 정착기를 거쳐 올해 안정기로 접어든 사전예고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전북자치도의 자체 분석결과 산업단지 내 기업은 위반율이 시행 전후 33.9%가 감소했고 산업단지 외 지역은 14.8%가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17.9%가 줄어들어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환경점검 사전예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환경법 위반율 감소에 따라 기업의 환경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전예고제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기업 환경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2월에는 시·군 지도점검 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4월에 7회에 걸쳐 진행된 찾아가는 교육에는 사전예고제와 환경관리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583명이 참여했다.

사전예고제 도입 후 이를 악용해 단속 회피만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는 사전예고제

를 통해 점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불시점검을 통해 사전예고제 악용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위반율 분석을 통해 사전예고제 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예고제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누리집, 공문 안내 외에도 문자나 유선을 통해 점검을 안내하는 방법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복지국장은 "배출시설 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2년을 맞아 사전예고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는 행정의 단속중심의 관리보다는 기업과 도민이 함께 하는 자율환경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축산농가 여름철 재해 최소화 적극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이상기후로 찾아온 여름철 재해(태풍, 집중호우, 폭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하는 등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상청은 6~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무더위와 엘니뇨 현상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축산농가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여름철 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상 전망과 재해별 사전 조치

요령 등을 농가에 안내하고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 219개소를 대상으로 20일까지 축산시설, 전기설비, 배수로 정비, 냉방설비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안 조치를 통해 여름철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재해 유형별 축사 및 가축관리 요령을 축산농가에 홍보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재난 문자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가축 폐사가 발생할 시 즉시 시군 축산부서나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